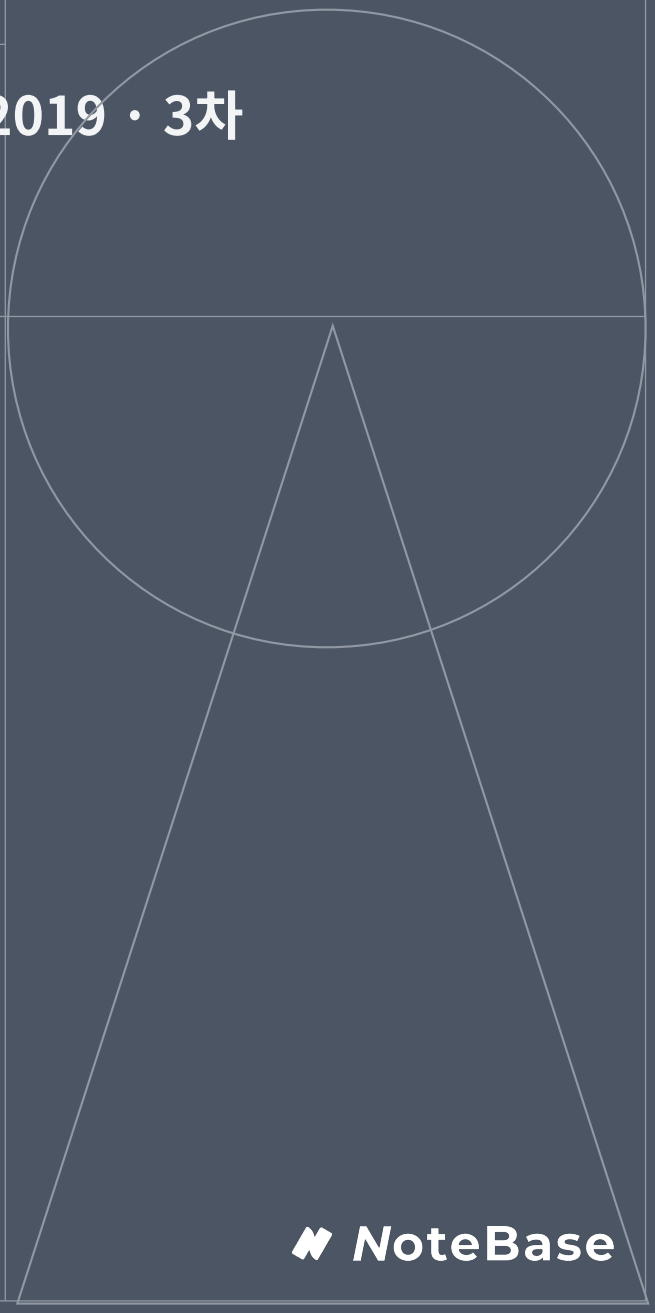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9 · 3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9 · 3차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9 · 3차

문 1. 다음은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설명이다. ㉠ ~ ㉥ 안에 문구가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구 분	직접세	간접세
조세 전가 가능 여부	(㉠)	(㉡)
부과대상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
조세 저항	(㉢)	(㉣)
비고	- 누진세는 주로 (㉤)에 적용되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 - 비례세는 주로 (㉥)에 적용되며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	

① ㉠: 가능, ㉡: 불가능, ㉢: 약함, ㉣: 강함, ㉤: 간접세, ㉥: 직접세

② ㉠: 불가능, ㉡: 가능, ㉢: 강함, ㉣: 약함, ㉤: 직접세, ㉥: 간접세

③ ㉠: 가능, ㉡: 불가능, ㉢: 강함, ㉣: 약함, ㉤: 간접세, ㉥: 직접세

④ ㉠: 불가능, ㉡: 가능, ㉢: 약함, ㉣: 강함, ㉤: 직접세, ㉥: 간접세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조세 전가 가능성, 조세 저항, 적용되는 세율 구조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조세 전가가 불가능하고 조세 저항이 강하며 누진세가 주로 적용된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 부담자가 달라질 수 있는 세금으로, 가격을 통한 조세 전가가 가능하고 조세 저항이 약하며 비례세가 주로 적용되어 소득 대비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 불가능, ㉡ 가능, ㉢ 강함, ㉣ 약함, ㉤ 직접세, ㉥ 간접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조세 전가와 조세 저항, 누진세·비례세의 적용 대상을 모두 반대로 연결하였다. 틀린 표현인 '㉠ 가능, ㉡ 불가능, ㉢ 약함, ㉣ 강함, ㉤ 간접세, ㉥ 직접세'는 '㉠ 불가능, ㉡ 가능, ㉢ 강함, ㉣ 약함, ㉤ 직접세, ㉥ 간접세'로 고쳐야 한다.
② O — 직접세는 전가가 불가능하고 조세 저항이 강하며 누진세가 주로 적용되고, 간접세는 전가가 가능하고 조세 저항이 약하며 비례세가 주로 적용된다. 여섯 빈칸이 모두 올바르다.
③ X — 조세 저항을 나타내는 ㉢·㉣만 옳고, 조세 전가와 세율 구조의 적용 대상을 반대로 연결하였다. 틀린 표현인 '㉠ 가능, ㉡ 불가능, ㉤ 간접세, ㉥ 직접세'는 '㉠ 불가능, ㉡ 가능, ㉤ 직접세, ㉥ 간접세'로 고쳐야 한다.
④ X — 조세 전가와 세율 구조의 적용 대상은 옳지만 조세 저항의 강도를 반대로 연결하였다. 틀린 표현인 '㉢ 약함, ㉣ 강함'은 '㉢ 강함, ㉣ 약함'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간접세는 세금을 가격에 포함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기기 쉬우므로 전가가 가능하지만, 세금을 직접 낸다는 인식은 약해 조세 저항도 약하다. '전가가 쉽다'는 사실을 '조세 저항이 강하다'와 연결하면 ④처럼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납세 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같은지를 본다. 같으면 직접세로 보아 전가 불가능·저항 강함·누진세를 연결하고, 다르면 간접세로 보아 전가 가능·저항 약함·비례세와 역진적 부담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직접세는 직접 부담하여 전가가 어렵고 저항이 강하며 누진적이고, 간접세는 가격으로 전가되어 저항이 약하며 비례세라도 부담은 역진적일 수 있다.

NoteBase

문 2. 다음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이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이것은 폭력과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강제력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① 근대 민주 국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② 민주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획득된다.
③ 국가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정당성 인정 요건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치권력이 단순한 폭력과 구별되는 근거와 민주 국가에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얻는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치권력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행사하는 제도화된 강제력이다. 단순한 폭력이 힘 자체에 의존한다면, 정치권력은 구성원에게 그 권위와 강제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정치권력은 근대 민주 국가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 관계가 형성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근대 민주 국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이다. 정치권력은 전근대 국가에서도 존재했으므로, 올바르게는 '정치권력은 근대 민주 국가 이전에도 존재했다'이다.
② O — 민주 국가의 정치권력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위임을 받아 획득되며, 이러한 절차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③ O —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에 근거한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정치권력의 중요한 특징이다.
④ O — 정치권력이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되려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민주주의의 성립 시기와 정치권력의 발생 시기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 있다. 민주적 선거와 국민의 동의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식이지만, 정치권력 자체는 전근대 국가에도 존재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치권력의 ‘존재’와 ‘정당화 방식’을 구분한다. 정치권력은 전근대에도 존재했지만, 민주 국가에서는 합법적 선거와 국민의 지지·동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암기 포인트

정치권력은 전근대에도 존재했고, 민주 국가에서는 선거·지지·동의로 정당성을 얻으며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한다.

NoteBase

문 3. 다음 연구 ㉠, ㉡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본 연구는 해양경찰 임무 중 하나인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최신 장비 도입을 하기 위해서이다. 해상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면 인근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최신 해양오염방제 장비를 도입하고자 외국 선진 장비들에 대한 논문 30건을 입수하여 한국에 특성화된 장비를 찾고자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효율적인 서해안 중국어선 나포 방법에 대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에 해양경찰서별 특성화된 중국어선 나포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 경비함정을 돌아다니며 해상특수기동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노하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보기>
가. ㉠은 해석 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나. ㉠은 조사 주제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 ㉠은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데 유리하다.
라. ㉡은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 ㉡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바. ㉡은 조사 대상자의 행동 동기나 가치 등 주관적인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헌 연구법과 면접법의 자료 수집 방식 및 장단점을 구별하고, <보기>에서 옳은 진술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은 기존 논문 30건을 수집·분석하므로 문헌 연구법이다. 문헌 연구법은 이미 존재하는 문헌이나 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비교적 적지만 문헌 해석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
㉡은 해상특수기동대를 직접 만나 자료를 수집하므로 면접법이다.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와 대화하여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행동의 동기·가치·태도 등 주관적 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 유리하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가: O. 문헌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할 우려가 있다.
나: X.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설명은 사람을 직접 조사 대상으로 삼는 면접법에 관련된 내용이며, 논문을 분석하는 ㉠의 특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은 연구 주제에 맞는 기존 문헌을 선정하고 분석한다.
다: X.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는 통제된 조건에서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실험법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은 기존 문헌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라: X.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는 실험법의 한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은 면접 상황에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마: X. 면접은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가 만나 대화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다. 올바르게는 문헌 연구법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바: O.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행동 동기나 가치와 같은 주관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옳은 것은 가와 바의 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진술은 1개가 아니라 가와 바의 2개이다. 틀린 표현 '1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② O. 옳은 진술이 가와 바의 2개이므로 정답이다.
③ X. 옳은 진술은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틀린 표현 '3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④ X. 옳은 진술은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틀린 표현 '4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연구 목적이 최신 장비 도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험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실제 자료 수집 방식은 기존 논문 분석이므로 문헌 연구법이다. 또한 ㉡의 '인터뷰'는 면접법을 직접 나타내므로, 실험법의 한계인 라와 문헌 연구법의 장점인 마를 ㉡의 특징으로 연결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 목적보다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기존 문헌·기록을 분석하면 문헌 연구법, 조사 대상자와 대화하면 면접법, 변인을 통제하고 인과관계를 확인하면 실험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논문·기록은 문헌 연구법, 인터뷰·심층 이해는 면접법, 통제·인과관계는 실험법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

① 주식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갖지만, 채권 보유자는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

③ 주식은 만기가 없으나, 채권은 만기가 있다.

④ 주식 보유자는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없으나, 채권 보유자는 이자 소득을 받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주식과 채권을 소유 관계, 수익의 성격, 만기,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식은 기업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다.
채권은 발행 주체가 자금을 빌리면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약속한 증권으로, 채권자는 발행 주체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채·지방채와 같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지만, 채권자는 기업의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이므로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권, 주식 발행이 가능하다'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③ O — 주식은 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지만, 일반적인 채권에는 원금을 상환하기로 정한 만기가 있다.
④ O — 주주가 받는 수익은 이자가 아니라 배당이고, 채권자는 약정된 조건에 따라 이자를 받는다.

오답 포인트

②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지방공기업을 혼동하기 쉽다. 공공 부문과 관련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주식은 '기업의 지분·배당·만기 없음', 채권은 '빌려준 돈·이자·원금 상환·만기 있음'으로 구분하고, 발행 주체가 주식회사인지도 함께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주식은 소유자의 지분, 채권은 채권자의 빌려준 돈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채권은 발행하지만 주식은 발행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밑줄 친 '아메바 조직'의 특징으로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A기업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조직 운영이 경직되는 문제의 해답을 아메바식 경영에서 찾았다. 아메바식 경영은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자체 분열해 여러 개체로 갈라지는 데서 착안한 조직 관리 기법이다. 아메바 조직은 평균 7~8명의 소집단으로 구성되며, 중간 관리 절차를 줄이고 수많은 업무 단위가 현장과 고객에 밀착한 가운데 독립적이며 주체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띤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조직으로 분할하거나 통합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처럼 조직은 수시로 세포 분열을 한다.

㉠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직 형태이다.
㉡ 의사 결정권이 분산되어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능동적이다.
㉢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조직 형태의 출현이 가능하다.
㉣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수직적으로는 계층화되고 수평적으로는 기능상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아메바 조직이 관료제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한 탈관료제 조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탈관료제와 관료제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아메바 조직은 조직을 자율적인 소집단으로 나누고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는 탈관료제 조직이다. 탈관료제 조직은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고, 정보 통신 등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관료제는 수직적 위계질서와 수평적 기능 분업을 통해 대규모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옳지만 ㉤이 틀리다. 독립적인 소집단에 의사 결정권이 분산되므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 계층화되고 수평적으로 기능상 분업 체계를 이룬다'는 관료제의 특징이다. 아메바 조직은 위계와 중간 관리 절차를 줄이고 자율적인 소집단을 유연하게 분할·통합하는 조직이라고 고쳐야 한다.

② X
㉠은 옳지만 ㉤이 틀리다. 자율적인 소집단이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수직적 계층화와 수평적 기능 분업은 관료제의 특징이므로, 아메바 조직은 수평적이고 유연한 소집단 중심의 조직이라고 고쳐야 한다.

③ X
㉢은 옳지만 ㉣이 틀리다. 과학 기술,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소집단 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협업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탈관료제 조직의 출현을 촉진한다. 그러나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관료제의 대표적 장점이다. 아메바 조직은 큰 조직을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경직성을 낮추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이라고 고쳐야 한다.

④ O
㉠과 ㉢은 모두 옳다. 아메바 조직은 자율적인 소집단을 중심으로 하므로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유연하고 분권적인 조직 형태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오답 포인트

㉡도 아메바 조직의 성격에 부합하지만 ①에는 관료제의 특징인 ㉤이 함께 들어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조합형 문항은 각 진술의 참·거짓뿐 아니라 한 쌍이 모두 옳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규모·자율성·분권화·유연한 분할과 통합·신속한 환경 대응은 탈관료제에, 수직적 위계·기능 분업·표준화·대규모 조직의 효율적 관리는 관료제에 연결한다. 그런 다음 조합에 포함된 진술이 모두 옳은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아메바 조직은 작게 나누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유연한 탈관료제 조직이다.

NoteBase

문 6. 다음에 제시된 ㉠과 ㉡은 국가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과 질서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
㉡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질서있고 평화로운 상태였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하였다.

① ㉠의 관점은 인간 본성에 관해 성선설 입장을 견지한다.
② ㉠은 ㉡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③ ㉠은 로크가, ㉡은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
④ ㉡은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자연 상태와 권리 양도에 관한 설명을 보고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 홉스: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안전과 질서를 위해 개인이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한다고 보았다. 강력한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방향이다.
㉡ 로크: 자연 상태에서도 생명·자유·재산의 자연권이 존재하지만 이를 더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정부가 신탁을 어기면 국민이 저항할 수 있으므로 시민혁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인간 본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홉스의 관점이다. 틀린 표현은 '성선설'이며, 올바르게는 성악설에 가까운 관점이라고 해야 한다.
② X — ㉠은 모든 권리를 주권자에게 양도하여 강력한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홉스의 이론이다. 틀린 표현은 '㉠은 ㉡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자연권과 저항권을 인정한 ㉡의 로크 이론이 민주주의 국가에 더 부합한다고 해야 한다.
③ X — 학자와 이론의 연결이 서로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이 홉스, ㉡이 로크의 사회계약설이다.
④ O — ㉡의 로크는 정부가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그 신탁을 어길 경우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이론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에서 홉스와 로크를 바꾸어 연결하거나, 사회계약설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도 민주주의적 이론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투쟁·권리 양도'는 홉스, '생명·자유·재산의 보호'는 로크라는 차이가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전면적 권리 양도가 보이면 홉스, 생명·자유·재산의 자연권과 저항권이 보이면 로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홉스는 투쟁·권리 양도·절대 권력, 로크는 생명·자유·재산·저항권이다.

NoteBase

문 7.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가.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 상소 제도는 법관의 오판가능성을 인정하여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에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다. 법원의 권한으로 재판에 관한 권한,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들 수 있다.
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마.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상 법원의 권한과 법관의 신분 보장, 상소 제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정확히 구별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항목의 수를 세는 문제이다. 핵심은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일사부재리 = 확정판결이 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지 않는 원칙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 처벌 금지는 이 원칙과 관련된다.
일사부재의 =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절차상의 원칙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가. O — 헌법 제108조에 따라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와 법원의 내부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 O — 상소는 하급심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오판을 바로잡고 재판의 공정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다. O — 법원은 사법권에 따른 재판권을 행사하고,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권과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을 가진다.
라. X — 헌법 제13조 제1항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이다. 틀린 표현은 '일사부재의'이고, 올바른 표현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이다.
마. O —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가, 나, 다, 마의 4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사실에 부합하는 항목은 가, 나, 다, 마의 4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2개' → 올바른 표현: '4개'이다.
② X — 사실에 부합하는 항목은 4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3개' → 올바른 표현: '4개'이다.
③ O — 가, 나, 다, 마가 사실에 부합하고 라만 용어가 잘못되었으므로 모두 4개이다.
④ X — 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5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5개' → 올바른 표현: '4개'이다.

오답 포인트

라의 헌법 문구 자체는 맞지만 그 명칭을 '일사부재의'라고 한 부분이 함정이다. 형사재판에서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이고, 국회에서 같은 회기 중 부결 안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 것은 일사부재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수형 문항에서는 각 항목을 독립적으로 O/X 판단한 뒤 O의 개수를 센다. '동일한 범죄·거듭 처벌'이면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 '부결된 안건·같은 회기'이면 일사부재의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재판의 확정력은 일사부재리, 국회의 부결 안건은 일사부재의이다. 이 문항은 가·나·다·마가 O이므로 4개이다.

NoteBase

문 8.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선급 검사관 갑은 소속한 선박회사의 드릴십 건조기술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해 빼내려다 걸려,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갑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 「산업 기술 유출 방지법」 해당 조항 부분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보기>

가. ㉡을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 해당 재판은 일단 중단된다.

나. ㉡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려면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한다.

다. ㉢은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라. ㉡을 하면서 갑은 ㉠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봤을 것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가, 다, 라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요건과 효과, 제청신청이 기각된 뒤의 헌법소원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원이 제청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이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이다.

핵심 구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제청하면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의 청구는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며,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옳지만 나는 틀리므로 '가, 나'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제청하려면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표현: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제청할 수 있다.'
② X — 가는 옳지만 다는 틀리므로 '가, 다'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갑의 청구는 제청신청 기각을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틀린 표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다.' 올바른 표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다.'
③ O — 가와 라가 모두 옳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지되고, 제청에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④ X — 가와 라는 옳지만 다가 틀리므로 '가, 다, 라'는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조합에 '다'를 포함한 부분이다. 올바른 표현: 옳은 항목은 '가, 라'이다.

오답 포인트

나에서는 당사자의 '제청신청'과 법원의 '제청'을 같은 것으로 보는 함정이 있다. 다에서는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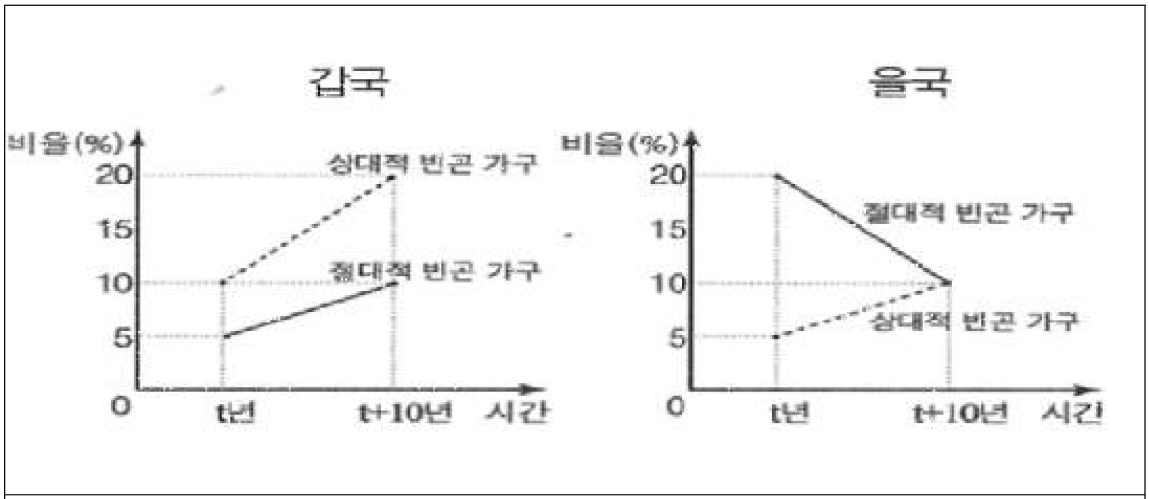
먼저 문제 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인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청할 수 있고, 실제 제청 시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지된다는 점을 적용한다. 당사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뒤 직접 청구했다면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판 전제 →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제청 → 재판 원칙적 정지, 신청 기각 →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NoteBase

문 9. 다음 그래프를 보고 <보기>에 있는 분석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갑국과 을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 절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 상대적 빈곤 가구 :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
※ 중위 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보기>

㉠ 갑국에서 t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 갑국에서 t+10년에 중위 소득은 같은 해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

㉢ 을국에서 t년에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은 50%미만이다.

㉣ 을국에서 t년+10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미만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과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을 비교하여 최저 생계비와 상대적 빈곤선의 높낮이, 빈곤 가구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같으므로 가구 소득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다.

NoteBase

자료 읽는 순서

1.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계비이고,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50%이다.
2.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빈곤 가구가 되므로 빈곤 가구 비율이 더 높은 쪽의 빈곤선이 더 높다.
3. 각 시점의 두 비율을 비교한 뒤 <보기>의 네 진술을 판정한다.

핵심 근거

㉠ O: 갑국의 t년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5%, 상대적 빈곤 가구가 10%이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므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된다.
㉡ O: 갑국의 t+10년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가 20%, 절대적 빈곤 가구가 10%이다. 따라서 중위 소득의 50%인 상대적 빈곤선이 최저 생계비보다 높고,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많다.
㉢ X: 을국의 t년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20%, 상대적 빈곤 가구가 5%이다.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 높으므로 '50% 미만'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의 비율이 50%보다 높다.
㉣ O: 을국의 t+10년에는 절대적 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이다. 이들은 소득순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므로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보다 낮고, 이들의 소득 합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 ㉡, ㉣의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은 분석은 1개가 아니라 ㉠, ㉡, ㉣의 3개이다. '1개'는 '3개'로 고쳐야 한다.
② X: 옳은 분석은 2개가 아니라 ㉠, ㉡, ㉣의 3개이다. '2개'는 '3개'로 고쳐야 한다.
③ O: 옳은 분석은 ㉠, ㉡, ㉣의 3개이므로 자료와 일치한다.
④ X: 옳은 분석은 4개가 아니라 ㉠, ㉡, ㉣의 3개이다. '4개'는 '3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 20%가 상대적 빈곤 가구 비율 5%보다 크다는 것은 최저 생계비가 상대적 빈곤선보다 높다는 뜻이다. 이를 반대로 읽어 '중위 소득 대비 최저 생계비가 50%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빈곤 가구 비율을 먼저 비교한다. 절대적 빈곤 비율이 더 작으면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고, 더 크면 높다. 두 비율이 같으면 두 빈곤선이 같은 소득 순위에서 빈곤 가구를 가른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빈곤 가구 비율이 큰 빈곤선이 더 높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50%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밑줄 친 '부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엠바고(embargo)는 여러 필요에 의해 취재 대상과 언론사 사이에 지켜야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취재 대상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엠바고를 남용할 때 예측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보기>

㉠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

㉡ 취재 대상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소홀해질 수 있다.

㉣ 언론보도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가기관이 엠바고를 남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과 엠바고의 본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엠바고는 취재 대상과 언론이 합의한 시점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관행이다. 국가기관이 이를 남용하면 공적 정보의 보도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부작용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맞지만 ㉡은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엠바고는 일정 기간 보도를 유예하므로 취재 대상 보호에 활용될 수 있다. 틀린 ㉡을 제외하고 ㉢을 포함한 '㉠, ㉢'이 올바른 조합이다.

② O
국가기관이 엠바고를 남용하면 언론의 보도 활동을 제약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하게 하여 알 권리 보장에도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과 ㉢의 조합이 옳다.

③ X
㉢은 맞지만 ㉡은 틀리다. '취재 대상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가 아니라, 남용된 엠바고로 공적 정보의 공개와 보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④ X
㉢은 맞지만 ㉣은 이 문맥의 부작용이 아니다. '언론보도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보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국가기관이 엠바고를 남용하여 보도를 억제할 때의 직접적인 부작용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다. 올바른 조합은 '㉠, ㉢'이다.

오답 포인트

㉡과 ㉣은 언론 보도와 관련된 일반적 우려이므로 그럴듯하지만, 문제는 '국가기관의 엠바고 남용'이 낳는 부작용을 묻는다. 보도 억제와 정보 공개 지연에 직접 연결되는 ㉠과 ㉢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 주체가 국가기관이고 문제 상황이 엠바고의 남용이라면, 보도가 부당하게 제한되어 침해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한다. 이때 핵심 가치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이다.

암기 포인트

엠바고 남용 → 보도 제한 →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행위에 ㉠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 책임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재산적·정신적으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 다른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보기>
가. ㉠은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나. ㉡은 민법상 책임 능력은 의사 능력을 책임 측면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보다 약간 높은 정신능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은 민법에서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라. ㉣은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으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 고용 관계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라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방법,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보기 가·나·다는 옳고 라는 틀리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낳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의사능력을 불법행위 책임의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의사능력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판단능력을 요구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19 · 3차

핵심 구분

가: 형법 제14조에 따라 과실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원칙은 고의범 처벌이고 과실범 처벌은 예외이다.
나: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에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여 책임능력을 요구한다.
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으로 정하고, 제763조가 제394조를 준용하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라: 감독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은 타인이 한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유형이지만,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각 공동행위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유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와 나는 옳지만 다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 옳은 보기가 '가, 나'뿐이라는 조합
올바른 표현: 옳은 보기는 '가, 나, 다'이다.

② O
가·나·다는 모두 옳고 라는 틀리므로 정확한 조합이다.

③ X
라를 포함하고 옳은 다를 제외하여 틀리다.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연대책임이므로, 이를 단순히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분류할 수 없다.
틀린 표현: '가, 나, 라'
올바른 표현: '가, 나, 다'

④ X
나를 제외하고 틀린 라를 포함하여 잘못된 조합이다. 책임능력에 관한 나는 옳으며, 라에서 타인 행위 책임의 예로 공동불법행위책임까지 묶은 부분은 틀리다.
틀린 표현: '가, 다, 라'
올바른 표현: '가, 나, 다'

오답 포인트

라의 '특수 불법 행위'라는 말만 보고 공동불법행위책임까지 모두 타인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묶는 것이 함정이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도 공동의 가해행위에 관여한 자인 반면, 감독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은 일정한 요건 아래 피감독자나 피용자의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의·과실, 책임능력, 손해의 범위와 배상방법을 차례로 확인한 뒤, 타인 행위 책임과 공동가해자의 연대책임을 구별한다. 조합형에서는 각 보기를 먼저 독립적으로 O/X 판단하고 마지막에 선지 조합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형법은 고의 원칙·과실 예외, 민법상 정신적 손해도 금전배상, 타인 행위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구별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철수는 ㉠ 목포해양경찰서에 근무중인 ㉡ 해양경찰관이다. 철수는 경비함정에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자신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구팀에서 야구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야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철수는 ㉢ 직장에 있는 야구동아리에 가입, 공무원배 야구대회에 ㉤ 투수로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① ㉠은 공식조직이나 ㉢은 비공식조직이다.

② ㉡은 귀속지위이나 ㉤은 성취지위이다.

③ ㉠과 ㉢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④ ㉢은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구분,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구분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식조직: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의도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비공식조직: 공식조직 안에서 개인적 친밀감이나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조직이다.
귀속지위: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지거나 자동으로 얻게 되는 지위이다.
성취지위: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목포해양경찰서는 공적 목적과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공식조직이고, ㉢ 직장 야구동아리는 직장 구성원들이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비공식조직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은 귀속지위'이다. 해양경찰관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취득하는 성취지위이므로, 올바르게는 '㉡과 ㉤은 모두 성취지위이다'이다.
③ O. 공식조직인 ㉠과 그 안에서 형성된 비공식조직인 ㉢은 구성원이 겹치므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④ O. 비공식조직인 ㉢의 활동이 공식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직 목표와 충돌하면 공식조직인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 해양경찰관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귀속지위로 오인하기 쉽다. 지위의 구분 기준은 공적 성격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으로 획득했는지 여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직은 설립 목적과 규칙이 분명하면 공식조직, 공식조직 안에서 친밀감이나 취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으면 비공식조직으로 판단한다. 지위는 출생처럼 저절로 주어지면 귀속지위, 직업이나 직책처럼 선택과 노력으로 얻으면 성취지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찰서는 공식조직, 직장 동아리는 비공식조직이며, 해양경찰관과 투수는 모두 성취지위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밑줄 친 부분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형사 절차는 법이 정한 범죄 행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 절차이다.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위하여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수사 절차이고, 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유·무죄를 다투는 소송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기>

가. ㉠의 피의자와 ㉡의 피고인 모두 진술거부권을 가진다.

나. ㉠의 피의자와 ㉡의 피고인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다. ㉠의 피의자와 ㉡의 피고인은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의 피의자와 ㉡의 피고인은 모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와 재판 단계의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형사절차상 권리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진술거부권·무죄추정·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두 지위 모두에 인정되지만,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적용 단계와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가. O —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도 재판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나. O —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되며, 수사 단계의 피의자도 그 보호를 받는다.
다. O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라. X —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대상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이다.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가 아니라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가, 나, 다의 3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설명은 1개가 아니라 가, 나, 다의 3개이다. 틀린 표현: 1개. 올바른 표현: 3개.
② X — 옳은 설명은 2개가 아니라 가, 나, 다의 3개이다. 틀린 표현: 2개. 올바른 표현: 3개.
③ O — 가, 나, 다가 옳고 라가 틀리므로 옳은 설명은 3개이다.
④ X — 라는 피고인에게도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틀리므로 옳은 설명은 4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 4개. 올바른 표현: 3개.

오답 포인트

라의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가 함정이다. 진술거부권,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두 지위 모두에 인정되지만,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단계의 제도이고 피고인 단계에서는 보석이 대응하는 제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소 제기 전이면 피의자, 공소 제기 후이면 피고인으로 구분한다. 공통적으로 보장되는 방어권인지 확인한 뒤, 신병 석방 제도는 '피의자—구속적부심사, 피고인—보석'으로 대응시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진술거부·무죄추정·변호인 조력은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신병 석방은 피의자에게 구속적부심사·피고인에게 보석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구 분	관점 A	관점 B
사회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사회적 역할의 중요도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	㉠
희소가치의 배분 방식은 어떻게 결정 되는가?	㉡	권력 유지를 위한 기득권 집단의 결정

① 관점 A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② ㉠에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가 적절하다.

③ 관점 B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④ ㉡에는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적절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발생 원인, 분배 방식, 불가피성의 관점에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점 A는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유능한 사람을 충원하기 위한 차등 보상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분배가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성원의 합의에 바탕을 둔다고 본다.
관점 B는 갈등론이다. 갈등론은 지배 집단이 권력을 유지하고 희소가치를 독점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며, 분배가 기득권 집단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관점 A'가 틀린 표현이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이 비롯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인 관점 B이다. 관점 A인 기능론은 역할의 중요도와 인재 충원을 위한 차등 보상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찾는다.
② X — ㉠에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등 분배'를 넣은 것이 틀렸다. ㉠은 갈등론의 불평등 발생 원인이므로 '지배 집단의 권력 유지와 희소가치 독점에 따른 차등 분배'가 적절하다. 개인의 능력이나 역할 중요도에 따른 차등 보상은 기능론의 설명이다.
③ X — '관점 B'가 틀린 표현이다. 사회 불평등을 사회 유지에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인 관점 A이다. 관점 B인 갈등론은 불평등을 지배 집단의 억압과 권력 독점에서 생긴 것으로 보므로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O — ㉡은 기능론의 희소가치 배분 방식을 묻는다. 기능론은 중요한 역할에 대한 차등 보상이 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결과라고 보므로 제시된 표현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표의 빈칸만 따로 보면 '능력에 따른 보상'도 그럴듯하지만, ㉠이 관점 B의 불평등 발생 원인이라는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기능론, '지배 관계에서 생겨 제거할 수 있다'는 갈등론의 판단을 서로 바꾸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역할 중요도·인재 충원·효율·합의·불가피'가 나오면 기능론으로, '지배와 피지배·권력 유지·기득권·희소가치 독점·제거 가능'이 나오면 갈등론으로 판단한다. 빈칸 문제에서는 먼저 행과 열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관점의 키워드를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기능론은 합의에 따른 차등 보상, 갈등론은 권력에 따른 차등 분배이다.

NoteBase

문 15. 범죄 성립의 3요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은 맞은편 선박이 빠르게 접근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운항중인 자신의 보트를 변침하여 타인의 양식장에 들어간 결과 양식장 시설을 손괴하였다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을'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절취할 때 만 13세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병'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신제품 기술을 넘겨주었다면, 강요에 의한 책임조각사유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정'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강도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범죄 성립의 세 단계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과 각 조각사유가 어느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막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위법성 조각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법질서 전체에서 허용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다. 책임 조각은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만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핵심 구분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현행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이고, 형사미성년자와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사유이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생명·신체 위해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제21조의 정당방위와 제22조의 긴급피난은 각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맞은편 선박의 급속한 접근으로 생명이라는 법익에 현재의 위난이 생겼고, 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양식장 시설을 손괴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X — 만 13세인 사람은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책임능력이 없어 벌하지 않는 것이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 '위법성이 조각되어' → 올바른 표현: '책임이 조각되어'이다.
③ X —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사유이다.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틀린 표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올바른 표현: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된다'이다.
④ X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조각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위법성이다. 틀린 표현: '책임이 조각된다' → 올바른 표현: '위법성이 조각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벌하지 아니한다'는 결론만 보고 모든 사유를 같은 단계로 처리하는 것이 함정이다. 특히 ②의 형사미성년자와 ③의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사유이고, ①의 긴급피난과 ④의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행위가 법질서상 허용되는 정당방위·긴급피난이면 위법성 조각으로,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없는 형사미성년자·강요된 행위이면 책임 조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당방위·긴급피난은 위법성, 형사미성년자·강요된 행위는 책임을 조각한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우리나라 법률이 제정·개정되는 과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법률안제안 → ㉡소관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 ㉤정부 → ㉥공포

<보기>

가. ㉠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나. ㉡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다. ㉢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라. ㉣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친다.

마. ㉤ 대통령은 20일 내 공포 또는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바.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법률안의 제안부터 공포와 효력 발생까지의 입법 절차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본회의 심의 방식, 대통령의 공포·재의요구 기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체계 심사는 법률안이 다른 법률이나 법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자구 심사는 법률안의 문구와 표현을 다듬는 것이다.

핵심 구분

헌법상 국회의원과 정부는 모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법률안 제안 —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
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한다.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4. 본회의 의결 — 심사보고와 필요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5. 정부 이송 —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 보낸다.
6. 공포와 시행 — 대통령이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순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내용 심사가 끝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 심의와 의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기 판단

가. O —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나. X —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곳은 ㉡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 법제사법위원회이다. 틀린 표현: '㉡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올바른 표현: '㉢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다. X — 법제사법위원회의 현행 위원 정수는 18명이므로 '국회의원 20명 이상'은 틀리다. 틀린 표현: '㉢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올바른 표현: '㉢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8명이다.'

라. X —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을 뿐, 언제나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친다.'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마. X — 대통령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 기간은 정부 이송 후 2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틀린 표현: '20일 내' 올바른 표현: '15일 내'이다.

바. O — 법률은 특별한 시행일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가와 바의 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보기는 1개가 아니라 가와 바의 2개이다. 틀린 표현: '1개' 올바른 표현: '2개'이다.

② O — 옳은 보기가 가와 바의 2개이므로 정답이다.

③ X — 옳은 보기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틀린 표현: '3개' 올바른 표현: '2개'이다.

④ X — 옳은 보기는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틀린 표현: '4개' 올바른 표현: '2개'이다.

오답 포인트

나의 '체계와 자구'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역할로 착각하거나, 마의 대통령 처리 기간 15일과 바의 법률 효력 발생 기간 20일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라는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원칙처럼 단정한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법 절차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내용,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본회의는 심의·표결, 대통령은 15일, 법률 시행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20일'의 순서로 판단한다. 개수형에서는 각 보기를 먼저 O/X로 확정한 뒤 O의 수를 센다.

암기 포인트

내용은 소관위, 체계·자구는 법사위, 대통령은 15일, 법률 효력은 공포 후 20일이다.

NoteBase

문 17. 다음은 경제 주체의 주요 활동과 목적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제 주체	주요 활동	목적
㉠	소비 활동의 주체	효용의 극대화
기업	㉡	㉢
㉣	경제 정책의 주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① ㉠은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

② ㉡에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다.

③ ㉢에는 '복지 정책의 실현'이 들어갈 수 있다.

④ ㉣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모두 수행하지 않는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가계·기업·정부의 주요 활동과 목적, 그리고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역할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은 가계이다. 가계는 소비 활동의 주체로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며,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이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노동·토지·자본의 공급자이다.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며,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이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이다. 따라서 ㉡에는 '생산 활동의 주체', ㉢에는 '이윤의 극대화'가 들어간다.
㉣은 정부이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수행하며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은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소비하는 가계이다. 가계는 노동·토지·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므로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에는 '생산 활동의 주체'가 들어가며,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이다.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가계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에 '복지 정책의 실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에는 기업의 목적인 '이윤의 극대화'가 들어간다.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는 정부의 목적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정부인 ㉣이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모두 수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소비하기도 하므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시장에 따라 경제 주체의 수요자·공급자 역할이 바뀐다는 점이 함정이다.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이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이며, 기업은 그 반대이다. 또한 '이윤 극대화'는 기업, '사회적 후생 극대화'는 정부의 목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효용-가계, 이윤-기업, 사회적 후생-정부'로 경제 주체를 확정한다. 그다음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계가 수요자·기업이 공급자이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가 공급자·기업이 수요자라는 대응 관계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가계는 효용과 요소 공급, 기업은 이윤과 생산물 공급, 정부는 사회적 후생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A재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격(원)	1,000	2,000	3,000	4,000	5,000
수요량(개)	100	90	80	70	60
공급량(개)	55	65	75	85	95

① 4,500원에서의 초과 공급량은 35개보다 적다.

② 균형 거래량은 75개에서 80개 사이에서 결정된다.

③ 가격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④ 최고 가격을 5,000원으로 설정하면 35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선형으로 해석하여 초과 공급량, 균형 거래량,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규제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가격이 1,000원 오를 때 수요량은 10개 감소하고 공급량은 10개 증가한다.
3,000원에서는 수요량 80개, 공급량 75개이고, 4,000원에서는 수요량 70개, 공급량 85개이므로 균형은 두 가격 사이에서 형성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초과 공급량은 $Q_s - Q_d$이다.
균형에서는 $Q_d = Q_s$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의 절댓값이며,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을 때만 시장을 제약한다.

계산 과정

1. 4,500원에서 수요량은 65개, 공급량은 90개이므로 초과 공급량은 $90 - 65 = 25$개이다.
2. 3,000원에서 초과 수요가 5개이고 4,000원에서 초과 공급이 15개이다. 가격이 1,000원 오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20개 줄어드므로, 5개의 차이가 사라지는 가격 상승분은 250원이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3,25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77.5개이다.
3.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90개에서 80개로 감소한다. 중간값 공식을 적용하면 탄력성은 $|(-10/85)/(1{,}000/2{,}500)| \approx 0.29$이므로 비탄력적이다.
4. 5,000원은 균형가격 3,250원보다 높은 가격상한이므로 구속력이 없고, 시장은 균형가격에서 거래된다.

선지 판단

① O. 4,500원에서 초과 공급량은 90개에서 65개를 뺀 25개이므로 35개보다 적다.
② O. 균형 거래량은 77.5개이므로 75개와 80개 사이에서 결정된다.
③ O.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가격이 오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약 0.29로 1보다 작으므로 비탄력적이다.
④ X. '최고 가격을 5,000원으로 설정하면 35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가 틀렸다. 5,000원의 가격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높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가격하한을 5,000원으로 설정할 때 공급량 95개와 수요량 60개의 차이인 35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5,000원에서 표에 나타난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 35개만 계산하게 유도한다. 그러나 최고가격은 가격상한이므로 균형가격보다 높게 정하면 시장가격을 제약하지 못한다. 35개의 초과 공급은 5,000원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유지되는 가격하한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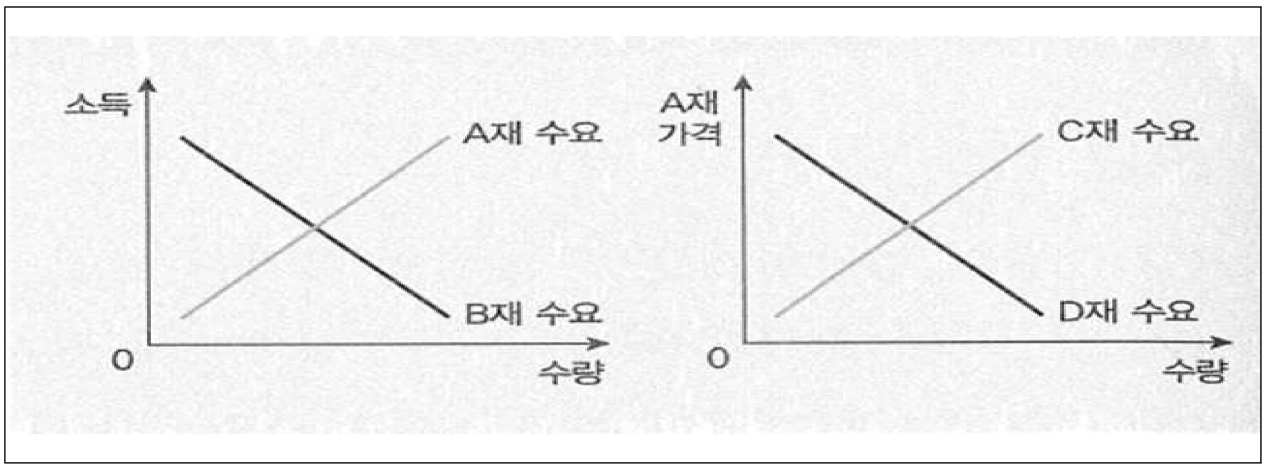
먼저 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가격을 찾고, 중간값은 일정한 변화폭으로 보간한다. 그다음 가격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낮을 때, 가격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만 구속력이 있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상한은 균형가격 아래에서 초과 수요, 가격하한은 균형가격 위에서 초과 공급을 만든다.

NoteBase

문 19. 다음 그림의 A~D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재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만, B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A재와 D재의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A재와 C재의 관계에 해당하는 예로는 커피와 녹차가 있다.

④ B재와 같은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왼쪽 그림에서는 소득과 수요량의 관계로 정상재와 열등재를, 오른쪽 그림에서는 A재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량 관계로 대체재와 보완재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왼쪽 그림은 재화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소득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A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정상재이고, B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열등재이다. 열등재라고 해서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틀린 표현인 'B재는 수요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B재는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열등재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오른쪽 그림에서 A재 가격이 하락할수록 D재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A재와 D재는 보완재이다. 보완재는 함께 소비되므로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증가하는 등 두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③ O — 오른쪽 그림에서 A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C재 수요량이 증가하므로 A재와 C재는 대체재이다. 커피 가격이 오르면 녹차 수요가 늘 수 있으므로 커피와 녹차는 대체재의 예에 해당한다.

④ O — 왼쪽 그림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B재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B재는 열등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소득-수요량 관계'와 '가격-수요량 관계'를 혼동하게 만든다. 정상재·열등재의 구분은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로 판단하고, 수요 법칙은 재화 자체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로축의 변수를 확인한다. 세로축이 소득이면 우상향은 정상재, 우하향은 열등재이다. 세로축이 다른 재화의 가격이면 우상향 관계는 대체재, 우하향 관계는 보완재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소득과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이다. 다른 재화의 가격과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이다.

NoteBase

문 20. 민주주의 원리 중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칙과 관련이 깊은 내용을 고르시오.

㉠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한다.
㉡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으며,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권력 분립의 목적과 제도적 모습을 입헌주의 및 국민 주권의 내용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맡기고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는 원리이다.
입헌주의는 헌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가가 헌법과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원리이다.
국민 주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헌법으로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는 입헌주의의 내용이고, 권력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누는 ㉢이 빠져 있다. 따라서 '㉠, ㉡'은 '㉡, ㉢'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은 입헌주의의 내용이며, 권력 분립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임을 나타내는 ㉡이 빠져 있다. 따라서 '㉠, ㉢'은 '㉡, ㉢'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은 권력 분립의 목적인 권력 남용 방지와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을, ㉢은 입법·행정·사법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는 제도적 모습을 각각 설명한다.
④ X — ㉣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의 내용이고, 권력 분립의 목적을 나타내는 ㉡이 빠져 있다. 따라서 '㉢, ㉣'은 '㉡, ㉢'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도 국가 권력의 제한을 말하므로 권력 분립처럼 보이지만, '헌법을 통해' 권력을 제한한다는 표현은 입헌주의를 가리킨다. 또한 ㉣의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뜻에 있다'는 표현은 국민 주권의 표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여러 기관에 분산·상호 견제·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권력 분립, '헌법으로 권력 제한·법에 따른 권한 행사'는 입헌주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국민의 자기 지배'는 국민 주권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권력 분립은 나누고 견제하며, 입헌주의는 헌법으로 제한하고,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NoteBase